

■ 르포 -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판정 … 영산강 승촌보 가보니

한길 물 속도 알 수 없어 … 불안한 관람객

균열여부 꿈꾸며 살피고
状 안전여부 문의하기도
환경단체 “근본대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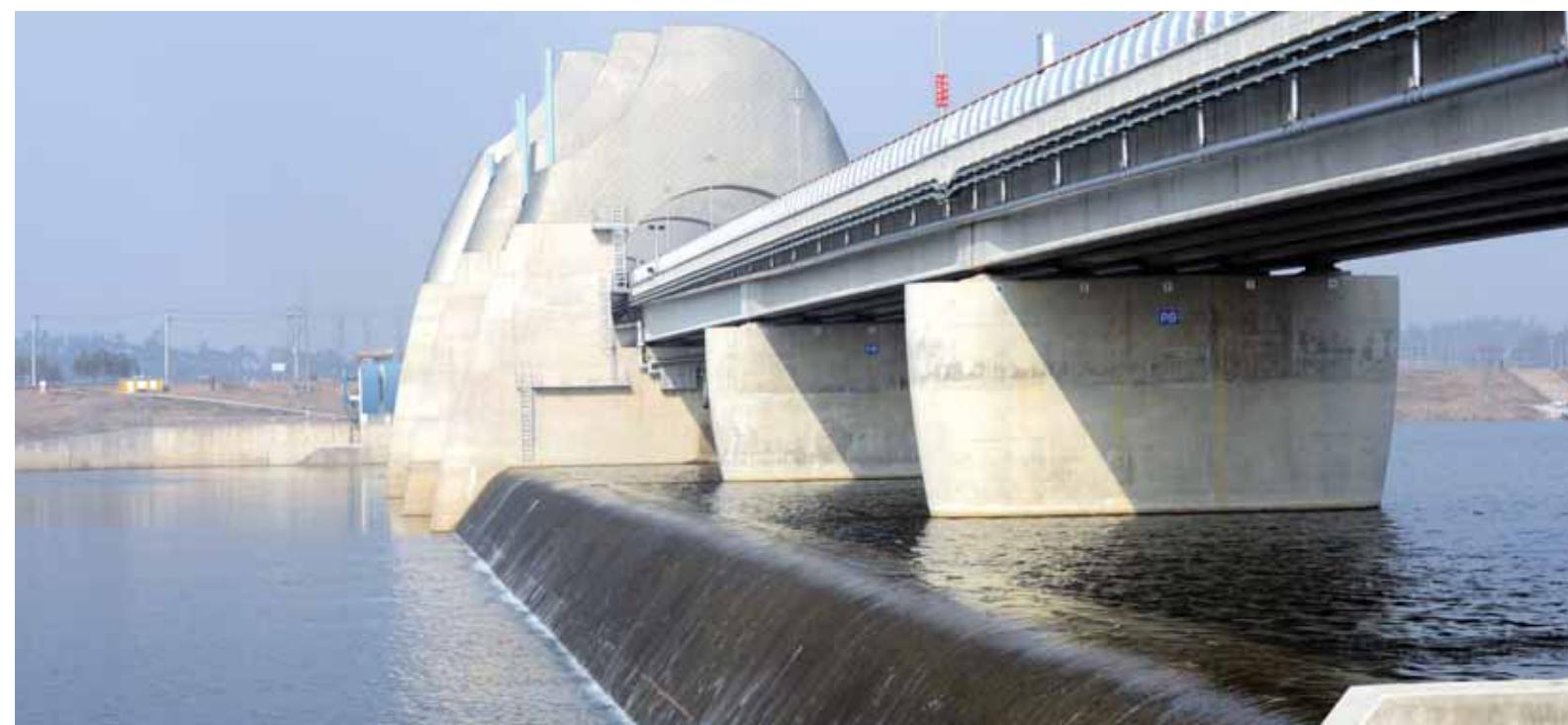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판정을 받은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승촌보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영산강 폭 512m에 9m 높이로 설치된 보 위로 강물이 넘쳐 흘렀고 전력 생산을 위해 설치한 800kw급 수력발전소는 보 밑에서 쉼 없이 돌아갔다.

승촌보와 인근 공원 일대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시설인 승촌보와 영산강 문화원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로 북적거렸다.

대부분 영산강 사업 이후 잘 가꾸어진 자전거도로와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찾은 이들지만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들어서인지 전망대의 망원경으로 승촌보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일부는 보 위를 지나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에 균열이 있는지, 무슨 하자가 있는지 꿈꾸며 살펴보기도 했다.

영산강 문화관의 한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특별히 관람객이 늘거나 준 것은 없지만 몇몇 분들이 찾아와 보의 안전상태에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20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촌보 밑을 통과한 물이 평소와 다름없이 영산강 하류로 흘러내리고 있다.

/남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해 문의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친척집을 찾았다 구경삼아 잠시 들렀다는 김진수(78)씨는 “뉴스를 보고 4대강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의심스러운 생각은 들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특별한 부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시설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하지만 4대강 사업반대운동을 벌여온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최지현 사무국장의 생각은 달랐다. 최씨는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끊임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왔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환경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났고, 결국 권력을 남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드러났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학자들과 정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주요 강에 설치된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산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감사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가 통보된 것은 아니다”며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적절한 사항에 대한 보완,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 정부 ‘4대강 점검위’ 만드나

인수위 ‘불개입’ 입장 속에도 해결책 고심

이정현 팀장 “정부에 불안·의혹 해소 의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나타나면서 새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을 총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4대강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불개입’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결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인수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4대강 사업 문제에 선불리 개입했다고 차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경우 새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책임 있는 대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정현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 “국가기관인 감

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있을 수는 없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대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부분과 별도의 현장 조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장방문 자체가 인수위가 4대강 논란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치는데다 현장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새 정부 출

“양측에서 객관적인 전문가를 불러 공동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대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부분과 별도의 현장 조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장방문 자체가 인수위가 4대강 논란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치는데다 현장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새 정부 출

범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은 뒤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진로를 결정해야 4대강 사업이 새 정부에 부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물·공기 등 환경서비스를 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실·수질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리 非영남·통합형

朴 당선인 이번주 靑 개편·총리 인선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안 발표로 새 정부의 골격을 완성하는 대로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조각(組閣) 인선 발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 2월 9일 수석비서관 제3인 대통령실의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비서관의 권한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을 금주 초 공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했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